

〈主 題〉

'97년 정보통신정책방향

정 홍 식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차 례 □

I. 머리말

II. '96년 정보통신정책 추진실적

III. '97년 정보통신정책 방향

IV. 맺는말

I. 정보통신 정책환경의 변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환경은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음성·데이터·동화상의 통합처리, 정보통신망의 광대역화 등을 바탕으로 개방화, 글로벌화의 경향을 띄고 있으며 통신·방송기술의 융합화에 의한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새로운 시장형성에 따라 통신·방송사업자간 전략적인 인수·합병·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통신시장이 소수의 공급국과 다수의 소비국으로 양분되어 감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전략적으로 개발·특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II. '96년 정보통신정책 추진실적

첫째, 정부는 지난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는데 이어 정보통신부에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하여 범국가적 정보화 촉진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을 발표,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화를 강조한 바 있다.

둘째, '96년 6월에는 '98년 WTO체제에 따른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하여 27개 신규사업자를 선정, 그동안 독·과점체제였던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12월에는 S/W,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 등 정

보통신산업을 차세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고비용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구조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셋째,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을 개정하여 관련규제체도를 개선하고 통신사업 전면경쟁체제에 대비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개발에 총 1,748억원을 투자하여 CDMA기술 상용화, 디지털위성방송 송수신기, TDX-10A 등의 개발성과를 거두었다.

III. '97년 정보통신정책 방향

'97년은 정보화촉진계획과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해 국가사회전반으로 폭넓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기반을 더욱 공고히 조성해 나갈 것이다.

1. 통신·방송 융합 대비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 통신·방송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통신·방송간 진입장벽 완화, 규제기관·법률의 일원화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공동으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콘텐츠,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기술주도(technology push)를 통해 통신·방송 융합을 촉진시키는 한편, 수요견인(demand pull)을 통해 뉴미디어서비스의 보급도 적극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선 사업허가, 후 무선국허가」 방식

을 「사업허가절차와 무선국 허가절차의 일원화」 방식 또는 「선 주파수 허가, 후 사업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통신·방송사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2. 전략적 정보통신기술 개발 추진

선진국의 급속한 기술혁신추세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기업·대학 등의 공동협력체제를 구축, 초고속교환기(ATM), 차세대이동통신(FPLMTS), 초고속병렬컴퓨터 및 디지털 방송기기개발 등을 주요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6,100억원의 재원을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확보해 놓은 것을 비롯, 2000년까지 총 1조 9,600억원의 연구개발 지원계획을 이미 수립하였다.

이외에 정부는 연구개발 전과정에 경쟁을 도입하여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개발역량 극대화를 위해 기업, 대학, 국책연구소의 역할분담을 정립하는 한편 국립품질기술원 「공산품품질평가」제도를 적극 활용, 사업자가 품질목표를 공표하고 미달시 보상토록하는 정보통신품질평가제도 등의 간접적인 기술개발정책도 추진할 것이다.

3.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지원

정부는 이론전문가가 아닌 산업계가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2000년까지 4개~5개의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총 300억원을 시범 지원하고, 매년 정보통신관련 전문대학 3개교·실업계 고교 3개교를 선정하여 실습기자재 등을 지원(2000년까지 120억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관련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매년 300개 정도의 기초연구과제를 공모지원(2000년까지 240억원)하는 등 기존 정보통신관련 대학 등의 인력양성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의 훈련원을 이용, 연 6,000여명의 운용인력, 기술인력 등 업계의 자체적 인력양성도 촉진하는 한편 전업주부인 여성전문인력을 위한 재택근무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산업계의 신기술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4. 중소기업정보통신기업지원 육성

정보통신분야기술은 주문형반도체(ASIC) 등 핵심 부품기술에 의해 좌우되므로 전문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개체를 위한 자금을 현재 2,000억원 규모에서 2000년에 연 3,000억원까지 확대하여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정보통신기업의 보유기술력, R&D투자의 자산가치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담보가치를 인정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대출하는 기술담보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유망 협력중소정보통신업체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대기업의 보증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S/W, 부품, ASIC설계, VAN 등 분야별로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을 추진하고 ETRI내 중소기업용 공동실험장비센터를 설치하는 등 창업지원을 확충할 것이다.

5. S/W 산업 중점 육성

2001년까지 S/W산업의 선진국 수준 진입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인력을 향후 5년간 7만명 정도 추가양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파견지원을 시행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구입 예산 반영을 의무화하고 정부 및 투자기관의 수요예보제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동기를 부여, 업체의 중장기적 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공공부문이 S/W 수요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에 설치한 S/W 지원센터를 4대 지방도시로 확대 설치하고, 지원센터의 기능도 S/W 창업지원 기능외에 우수프로그램발굴 보급사업, S/W 유통 지원체제 구축, S/W 수출지원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한국S/W산업협회가 중심이 되고 민·광공동출연으로 채무보증 등 S/W 공제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콘텐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컴퓨터게임산업 등 멀티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술, 인력개발 등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병역특례 기능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을 지원 육성할 계획이다.

6.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공정경쟁 기반강화

'90년대초부터 일관된 경쟁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통신서비스에 경쟁이 도입되었으나 시내전화 등 일부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한 분야가 있어 '97년중에 이들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를 허가하고 다수 통신사업자간의 실질적인 경쟁체제 정착을 위해 공정 경

쟁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가.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신규서비스 도입

독점상태인 시내전화에 올해중 전국규모의 1개 경쟁사업자를 허가하여 통신사업전반에 걸쳐 경쟁활성화를 기하고 현재 복점체제인 시외전화에도 1개 사업자를 추가허가할 예정이며, 주파수공용통신(TRS)은 '96년 6월 신청이 없었던 일부지역(전북, 충북, 강원 등)의 경우 올해 재신청을 받아 추가허가할 계획이다.

초고속망사업은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보완후 사업자 승인을 추진하고 국제해저광케이블사업, 위성사업도 신청기업에 대해 회선임대역무사업자로 허가할 방침이며 위성휴대통신(GMPCS)은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올해 허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고 차세대이동통신(FPLMTS)의 사업자 허가시기 및 방법은 '98년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나 FPLMTS 실험용 주파수는 조기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음성회선재판매, 국제콜백서비스와 인터넷전화와 같은 틈새형 서비스는 각각 WTO협상결과와 기술개발추세, 외국의 규제추이, 기존 전화사업과 국제회선 임대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허용을 추진할 것이다.

나. 통신사업 관련제도 개선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하여 통신사업 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97. 1월중)전에 방침을 확정하여 허가 심사기준, 허가시기, 허가신청요령 등을 고시할 계획이며, 평가방식은 제안서평가방식을 유지하되, 경제력 집중문제가 적은 지역 무선통신사업(TRS, 무선호출)에 대한 R&D 출연금 최고액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97. 2월로 예상되는 WTO협상 타결후 외국인 지분제한, 회선재판매사업 허용근거, 이종서비스간 인수·합병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전기통신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공정경쟁 여건조성

공정한 경쟁여건조성을 위해 설비제공, 상호접속, 회계분리, 통신망정보 제공 등 통신사업자간 이해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실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사실 공표, 손해배상책임,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

재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통신위원회에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신설하는등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여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확보를 위한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규제기간으로 전문화해 나가고, 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심의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정보통신정책자문위를 신설·활용할 계획이다.

7. 한국통신 경영혁신

한국통신이 우리나라의 주도적 통신사업자로서 세계일류의 통신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환경에 맞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전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경영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국통신의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배제 또는 정부지분 49% 이하 축소방안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회사의 독립경영도 촉진할 것이다.

8.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등 국내업체간 전략적 제휴나 공정경쟁을 도모하도록 기구성된 「해외진출지원협의회」운용을 보다 내실화하고 올 상반기중 중소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 틈새시장위주에서 선진국, 성장시장으로 해외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성장잠재력, 주변 국가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전략거점지역을 확보하는 한편 관세부처와 협의하여 EDCF자금 및 수출보험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간 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고위인사 상호방문 등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APII 협력센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PII협력사업에 APEC 개도국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첨단기술협력 및 해외정보수집, 통상현안에의 조기대처 등을 위해 주요해외공관에의 주재관 파견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IV. 맺는말

앞으로의 국가발전은 국가사회전반의 핵심인프라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추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부문이 경제·사회의 제부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방화·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최근의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다양성가 창의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정부, 민간업계, 학계, 연구소 등 다양한 제부문간의 유기적이고 정향성있는 통합된 노력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와같은 노력이 결집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훈식

- 1971년 5월: 행정고등고시(10회)
- 1971년 11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
- 1972년 9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77년 9월: 영국 Bradford대 연수
- 1977년 9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서기관)
- 1979년 4월: 대통령비서실(전자·통신·정보산업담당)
- 1986년 8월: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제학)졸업
(경제석사)
- 1987년 11월: 대통령비서실(전자·통신·정보산업담당, 부이사관)
- 1989년 6월: 체신부(전산망조정위 사무국장)
- 1990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 1991년 1월: 체신부 정보통신국장(이사관)
- 1993년 1월: 국방대학원
- 1994년 1월: 체신부전산관리소장
- 1995년 1월: 정보통신정책실장겸 초고속정보통신 기획단장(관리관)